

[사후 보도자료]

[공동 기자회견]

#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연대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킹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 발언문

발언1) 한국여성민우회 문미향 활동가

저는 KBS에서 뉴스PD로 약3년을 일했습니다. 큐시트를 짜며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며, 어떤 이에게 가 닿는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파는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몸소 알았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스피커는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그 스피커에 따라 여론이 형성됨을 알았고 그 정보를 가진 주체, 스피커를 가진 이에게 권력이 생긴다는 것도 감각 했습니다. 기자와 데스크는 정보가 어떻게 뉴스가 되는지, 그 뉴스를 전달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뉴스의 사실과 근거에 대해서, 의도가 담긴 표현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 보도국은 살얼음판 같았고, 숨 쉬기도 어려워 사무실을 나와서 긴장했던 숨을 몰아쉬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인상적인 것은 어떤 정보를 둘러싼 의혹과 그 의혹을 알리려는 열망, 그 뉴스가 전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라는 근거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기억납니다. 기자들은 현장으로 뛰어갔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자들이 지자체 각 곳에 연락을 돌리고 타 언론사에 나왔던 “전원구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KBS 보도국장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보도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밝혔고 KBS는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을 했던 일이 제가 약3년을 근무하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민우회의 미디어팀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언론의 신뢰가 사회 신뢰에 이어진다는 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권력은 자신에게 이로운 정보를 생산하려고 하고, 보도에 개입하려고 할 때 “방송 독립”을 말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욕심을 가진 개인이 공영방송 안에서 자신의 영위를 위해 뉴스를 거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공정성 시비가 공영방송이

없어도 된다는 명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정성은 시민을 위한 방향이었는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저널리즘에 ‘편파성 프레임’을 잡은 사람은 권력자였습니까, 시민이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정치적 이유가 없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피커를 가진 정치인의 발화가 여론을 호도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지키는 것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동원했습니다.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오류가 지적되었음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안본체 하며 ‘수신료 분리징수’만 수면 위로 올려놨습니다. ‘국민제안’의 신뢰성조차 질문하지 않는 언론을 보며 공동체의 신뢰는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정보를 나르는 언론만 남은 이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줄속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공론장에 나와 이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님을 설명하십시오.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공영방송은 OTT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 서비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이 정보 전달의 창구를 무엇으로 할지 설득하십시오. 재난 상황에 계층과 계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할 창구의 자원은 무엇으로 마련할지, 지금껏 한국 사회는 이 정보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한 구조를 “수신료”로 만들어 왔음을 가리지 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대통령의 권력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고, 공영방송의 경제적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이 답을 마련하십시오. 이를 위해 줄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제를 중단하십시오. 공영성과 함께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긴 쉽지만 다시 재건하는데는 수많은 시간과 자원이 듭니다. 이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

## 발언2: 언론인권센터 조아라 활동가

최근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봅니다. 재미도 없고 딱히 유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데 왜 굳이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OTT에도, 유튜브에도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이니깐요. 이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공영방송의 콘텐츠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또는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OTT에서 재난에 대한 알림과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가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 수많은 날것의 영상들은 재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교육 부담 경감을 역설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EBS와의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맞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방송으로서의 EBS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고, 그렇기에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고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누구나 재난에 대한 알림과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기초적인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영방송이 최근 이와 같은 역할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다른 방식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안이하게 대응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운영 자원 확보와 연결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졸속처리로 갈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KBS와 EBS에 배분되는 TV수신료의 분리징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으며, 분리징수가 실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리징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 없이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징수율이 하락하여 KBS와 EBS가 방송사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은 바로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미디어 인프라, 공공의 방송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것인 공영방송의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주도적 역할 역시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발언3: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은 수신료 등의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말 그대로 방송을 수신하고 내는 비용이 아닌, 이런 공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방송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텔레비전을 대신할 수많은 플랫폼과 매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방송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범람과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보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는 현재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이런 기능 수행 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환경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확산하는 일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저출생, 지역소멸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한 지금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또한 공영방송의 몫입니다. 공영방송이 사라진다면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난민,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꼭 이야기되어야 함에도 돈이 되지 않는 콘텐츠는 사라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 거짓 정보 또한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보장된 언론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와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지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 또한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와 공익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KBS**가 앞서 말한 공적 책무를 다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분리징수는 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 후에 시청자들이 그 책임을 더욱 묻고, 강화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징수 방법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송을 만들고 감시해야 할지를 논의할 때입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을 이야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수신료 부분만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분리징수를 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진행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정확하게 정보를 밝히고 어떤 것이 시민의 권리를 위하는 일인지를 명확히 밝히며 공론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

#### 발언4: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TV분리징수의 시작을 생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라는 무지의 말로 시작된 게 바로 TV분리징수입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임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무지의 말씀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KBS와 관련해 ‘사극 의무제작’과 ‘국제뉴스 30% 이상’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KBS는 현재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EBS와의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는 이것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론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수신료 폐지, 인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랑스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없어진 재원을 세금으로 총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가 밝힌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가 그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수신료를 인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온라인 수신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면서 예시로 든 두 국가 모두 ‘수신료 폐지 혹은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공영방송에 들어가는 재원과 관련한 대안을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되면, 징수율이 떨어질텐데,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이것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KBS의 아쉬운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없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며 ‘KBS를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분리와 관련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운운하며 ‘찬반’ 프레임은 건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응은 무엇입니까? 그 프레임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KBS는 EBS와 함께 ‘분리징수’를 포함해 산정 방법에서 기구설치까지, 배분방향과 배분율, 수신료 운용과 감독 그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시청자들을 중심에 놓고 고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김의철 사장의 첫 메시지가 ‘시청자’를 향하기보다는 ‘분리징수 철회와 사퇴’였다는 점이 아쉬웠던 이유입니다. **KBS** 구성원들의 사장 사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KBS**는 내부적으로 제작 자율성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방송사 중 한 곳입니다. 만일,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누구 한 명의 책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V**수신료는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면 가장 손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방송장악을 막는 것 또한 정치권에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제도는 개선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KBS** 구성원들의 힘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사들은 지금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동안 공영방송이 끊임없이 말해왔던 ‘국민’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방송이라고 이야기해오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